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34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2월 11일 (음력 11월 5일) 화요일

## 윤장현 전 시장 파문 '광주 사학비리 의혹' 확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연루된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사건 파문이 광주지역 사립학교 채용비리 의혹으로 확대되면서 사학의 공공성 확보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이 지난해 12월 광주지역 모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 A씨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믿은 B씨를 교사로 채용해달라고 청탁했다.

B씨는 윤 전 시장에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속여 4억50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피고인 김모(49·여)씨의 딸이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의 청탁을 받고 김씨의 딸 B씨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로 사립학교법인 상인이사 A씨와 학교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월 합격해 기간제교사로 근무해 온 B씨는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최근 사직했다. 윤 전 시장은 취업청탁을 시인하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언론에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립학교 측은 윤 전 시장으로부터 청탁은 받았지만 B씨의 성적이 우수해 부당하게 채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 윤 전 시장 사기범 딸 사학법인에 채용청탁 사립학교 측 "청탁받았지만 채용은 정당해" 사학법인협의회 '위탁채용' 거부 명분 무색

하지만 광주지역 사립학교법인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A씨가 채용비리에 휘말리면서 사학비리 의혹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A씨는 올해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신규교사 위탁채용 확대를 거부하며 "교육청이 일부 사학법인의 문제를 전제인양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한 장본인이어서 도덕적 책임론도 제기될 전망이다.

올해 위탁채용은 사학법인협의회가 고유인사권을 주장하며 반대에 전체 사학법인 37곳 중 6개 법인만 참여했다.

광주지역 전체 중·고등학교 157곳 중 사립학교는 67곳으로 사학 점유율이 42.7%에 달하지만 채용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학법인들은 건학 이념에 맞는 인재를

자율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교 운영예산의 90% 이상을 공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채용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결과 광주지역 사립학교법인 14곳이 이사장의 자녀나 6촌 이내의 친인척 25명을 교사로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삼원 광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윤 전 시장 사건만 봐도 사학법인이 채용청탁 로비창구로 이용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사학법인 공공성 확대는 시민적인 합의가 이뤄진 사안인 만큼 위탁채용을 전면 실시하는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광주 동구 광주지검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라이벌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오차범위내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4일 공개됐다. '해경공감씨' 트위터소유주 논란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주시장은 범여권 후보 조사에서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달 26~30일 전국 성인남녀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15.1%로 1위에 올랐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2.9%로 이 총리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뒤진 2위를 기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8.7%)이 3위, 이재명 경주시장(7.0%)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7.0%)이 공동 4위에 올랐다. 김경수 경남지사(6.9%)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6.9%) 유승민 전 비례대표(6.9%)가 공동 6위였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6.9%)가 9위를 기록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조인호 기자·자료사진=뉴시스



## 중국 조이롱차 2500억 광주 투자 33개월만에 무산

조이롱 한국법인 측에 "협력 청산" 통보...행정력 낭비 지적



중국의 구룡(九龍·조이롱)자동차가 중국 현지에서 생산한 18인승 전기승합차가 지난 2016년 4월 3일 광주시청 1층 시민실에 전시된 모습.

광주시가 '친환경차 메카'를 꿈꾸며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중국 조이롱자동차의 2500억대 광주공장 투자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협약 체결 2년9개월 만이다.

광주시는 10일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지켜볼 때 중국 조이롱자동차의 광주투자 의지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해 한국법인인 조이롱코리아에 협력 관계 청산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이롱 측은 광주에서 전기차를 판매할 경우 지급하려던 시비 보조금도 백지화됐고, 그린카진흥원에서 무상대여했던 법인사무실도 정리작업에 들어갔다. 내년 본예산에도 조이롱 관련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조이롱차는 2016년 3월 협약 당시 2020년까지 2500억원을 투자해 광주에 연간 10만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공장을 짓고 2017년부터 E6전기차를 2000대씩 생산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투자사업은 지지부진하기만 했다.

광주에 직접 생산설비를 갖추려던 조이롱 측이 우선 차를 시범 판매해본 뒤 시장성에 따라 공장설립 계획을 세우겠다고 기 분인장을 반복하면서 '메이드 인 광주' 전

기차 생산을 전제로 한 2500억 투자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고, 진정성을 의심하는 '빅딜 논란' 등을 우려해 보조금 심의 단계에서부터 보다 신중한 자세로 돌아섰다.

지난 5월, 대당 3000만원 상당의 시비 보조금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서비스센터 3곳 이상 설립, 대당 1억5000만원으로 책정된 차량가격 변동이 5%를 넘지 않을 것, 충분한 충전기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조이롱 측은 조치가 미흡하자 시는 '공장 설립 등에 대한 최종계획을 밝혀 달라'며 최후통첩성 공문까지 보냈으나 무위에 그쳤다.

급기야 최근에는 조이롱 측이 대구의 한 코스닥 상장사와 전기차 위탁판매 계획을 체결해 광주 생산공장 신축 계획을 둘러싼 진정성 논란까지 증폭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투자여건이 구체화되고 신뢰할만한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협력관계를 복원할 수 있겠지만 현 상태로는 도저히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사실상 결별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이롱차의 협약무산을 두고 광주시의 무리한 성과주의 행정과 허술한 투자유치 행정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과정에서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은홍 기자

<b>해양기후</b> 호흡기질환, 면역강화	<b>해수</b> 재활운동, 혈액순환
<b>갯벌</b> 근골격계 이완, 피부질환	<b>해조류</b> 면역강화, 피부질환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해양치유로 몸과 마음 힐링하세요!**

청정한 기후환경과 최고 품질의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양치유산업 최적지입니다.

완도군에서는 2030년까지 1조원을 투입하여 해양헬스케어센터, 해양병원, 치유공원 등 공공시설과 해양리조트, 바이오기업 등의 민자시설이 복합된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